

正體性 위기의 現實的 내용과 歷史的 근원

柳 初 夏

(忠北大 哲學科)

1. 正體性的 의미와 내용

우리 문화가 비틀거리고 있다. 사상이 허둥대고 학문이 휘청거린다. 우리가 있는 땅이 어디인지 애매하고 우리가 누구인지조차 몽롱하다. '우리'가 없는 곳에 우리는 지금 살고 있다. 우리의 정체성이 흔들리고 있다.

正體性이란 무엇인가? 正體 또는 正體性이란 타자와 구분되고 구별되는 자아로서의 존재지속, 곧 自己同一性이다.

공간적으로 나는 나를 이루는 다양한 요소·요인들의 총체이다. 생략적으로나 선택적으로 내가 속한 정치·경제·사회·문화적 집단은 동시에 나를 규정하며 따라서 나와 동일시된다. 나의 정체성은 주관적으로나 객관적으로 나와 동일시되는 측면들의 총합이다.

시간적으로 나는 성장과 노쇠를 비롯한 다양한 변화와 발전을 포괄한다. 그러한 변화와 발전의 바탕이자 통합이 곧 나의 정체이다. 끊임 없이 생성되고 재생성되는 자기형성적 존재인 나는 현실적 과거 누적과 잠재적 미래지향의 통합이다.

이러한 시간적·공간적 요인들의 총체로서 정체성은 성립한다.

개인 수준에서의 정체성은 시간축의 관점에서

는 현실을 해석하고 현실에 대응하는 사상의식, 특히 도덕적·가치관적 태도가 핵심이 된다. 공간축으로 본 개인적 정체성의 中心 및 重心은 민족과 국가라는 공동체의 수준에 놓여 있으며, 그 실질적 내용은 계급소속 및 계급소속의식이다.

한국학문의 正體는 '한국' 자체의 正體에 기반한다. 그것은 한국민족과 그 실질내용인 대중 또는 민중의 현실적·당위적 사상·의식·문화와의 관계 위에서만 의미있게 성립한다. 다시 말해 우리 학문의 정체성은 한국민중의 현실적 의식과 삶을 생생하게 반영하는 동시에 한국민중이 지향하고 지녀야 할 바람직한 사상과 문화로 제시함으로써만 올바르게 정립될 수 있다.

2. 正體性 危機의 핵심적 內容

한국학문이 맞고 있는 정체성 위기의 핵심은 한 마디로 '주체성의 결핍' 또는 '주체의 결석'에 있다. 主體不在의 병폐는 현실과 역사의 관점에서 보면 곧 사대성에의 매몰이다. 어떤 분야의 학문이건 그 나름의 고유한 방법적 원리와 이론사를 갖게 마련이다. 그러나 오늘날 한국에서 전개되고 있는 학문은 대부분 서양 것으로 채워져 있다. 철학과 과학의 다양한 전공분야마다 거의 대부분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를 鼻祖로

모시고 훗, 칸트를 방법적 원리의 선구자로 받들며 불란서, 독일, 영국, 미국의 근현대 학자들을 모범적 이론가로 숭상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서양과 서양적인 것에 대한 사대주의적 존중은 현대사회에서 동양 또는 한국이 처한 위치로 보아 당연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현대에서의 상대적 후진성이 모든 역사시기에서의 후진성을 입증하는 근거일 수는 없다. 더욱이 서양인들이 의식적·무의식적으로 지니온 동양에 대한 편견을 그대로 수용할 수는 없다. 헤겔, 마르크스, 브린튼 등을 예로 볼 때 서양의 학자들은 동양에 대한 부정적 선입견을 드러내고 있다. 그들에게 '동양적'이라는 형용사는 '후진적' '야만적' '비체계적' '전근대적' 등의 의미를 지닌다. 그들의 상상적 의미부여는 아마도 징기스칸과 그 후에들로부터 침입을 당한 중세유럽인들이 지녔던 동양에 대한 공포와 혐오 그리고 치욕감의 근현대적 잔여물일 것이다.

현대 중국학의 성실한 일꾼인 영국인 니드함은 13세기에 이르도록 서양의 과학과 문명은 동양에 비해 전체적으로 훨씬 후진적이었으며 17세기 이후에야 비로소 선진적 지위를 점하기 시작했다는 역사적 사실을 방대한 자료로 밝힌 바 있다. 서양인들조차 인정하는 동양사의 선진성을 우리가 굳이 부정할 이유는 없을 것이다. 니드함의 연구작업은 물론 중국의 과학과 문명을 주제로 한 것이다. 따라서 그의 해명이 곧 한국 문명사에 대한 적극적 평가의 근거일 수는 없다. 그러나 그 반대의 것이 진실인 것은 더욱 아니다. 어떤 경우에도 한국의 역사는 그 자체로 밝혀진 다음에야 평가될 수 있다.

나침판이나 금속활자를 고안하고 발명한 신라·고려의 이름없는 匠人과학자는 물론 이름을 남긴 조선의 빼어난 학자들에 대해서까지도 오늘날의 우리 학문은 거의 무관심한 것이 사실이다. 물리학·천문학 등 자연과학이나 기계공학·금속공학 등 산업기술 관련 응용과학 분야에서 蔣英實을 역사적·이론적으로 연구하거나 교육하는 사례는 거의 없을 것이다. 朴堧에 대한 음악계의 태도나 許浚에 대한 의학계의 자세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장영실, 박연, 허준의 과학기

술적 업적이라는 '역사적 사실'은 오늘의 '현실적 발전'에 기여할 만큼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과거의 과학과 기술은 현대의 과학과 기술의 방법과 이론에 비추어 구체적으로 밝힐 때 새로운 의미를 지닐 수 있다. 문제는 과거적 사실들을 추상적 역사기술의 지평에 머물게 하는 데에 있다.

한국문화를 저들게 하는 사대주의가 번지는 궁극적 요인은 물론 한국인 자신의 '의식'에 있다. 그러나 대중 또는 민중으로서의 한국인이 지닌 사회적 '의식'은 그 자체로만 밝혀질 수 없다. 한국적 사회의식을 물들이는 사회적 '존재'의 측면을 밝힐 때에만 한국적 사대주의는 그 뿌리가 밝혀지고 극복될 수 있다.

한국학문의 정체성 위기는 학문 자체만의 요인으로 발생한 것이 아니다. 학문적 위기의 근본요인은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경제정치적 후진성에 있고, 그 현실적 후진성의 원천적 요인은 주체적 근대화를 이루지 못한 역사적 후진성에 있다.

한국의 학문적·사상적 전통에 대한 오늘날의 왜곡된 안목들이 형성된 때에는 역사적 한국사회를 강타한 세 가지 흐름의 외세침략이 강력한 영향을 끼쳤다. 중국, 일본, 미국은 한국사의 서로 다른 시대에 정치·군사·경제·문화의 각 측면에서 서로 다른 방식으로 침략해 들어왔고, 그로 인해 역사적 한국인의 삶과 의식은 중요한 변화를 겪었다. 그들 외세에 대한 대응은 당시 한국사 구성주체의 각성정도와 대외적 세력관계의 추이에 따라 확고한 대결의식과 치열한 투쟁으로 표현되기도 했다. 그러나 그들 세 외세의 침략은 철학적 사유를 중심으로 한 사상적·문화적 측면에서는 역사적 공동주체의 자기동일성에 심각한 균열을 초래하였고, 그 결과는 오늘에까지 이어지고 있다.

한국사상사가 겪은 세 차례의 비극 가운데 가장 크게 영향을 남긴 것은 마지막의 것이다. 일제의 퇴각과 동시에 새로운 점령군을 진주시켜 3년간 이 땅을 직접 통치한 미국은 정치적·군사적 지배와 결합된 경제적·문화적 지배를 통해 자본주의적 생활방식을 전면화하는 데 성공했다. 미국은 군정지배시기 동안 단일한 민주국

가를 향한 민족적·민중적 염원을 무력과 이데올로기 공세를 통해 진압하였고,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경제적 원조와 군사적 유대를 통해 남한국민의 정치적·문화적 생활형태를 조종해왔다. 그리하여 미국은 아직껏 한국사회에서 강력한 규정력을 발휘하고 있다. 우루과이라운드를 통한 미국의 최근 수입개방압력은 먹거리문화를 포함한 한국인의 생활방식을 통째로 미국화·서양화하려는 거시적 계획의 일환임을 적시해야 할 것이다.

이제 한국의 학문이 직면한 정체성 위기의 내용적 핵심인 사대주의의 역사적 연원과 현실적 요인들을 살펴보기로 한다.

3. 中國에 대한 역사적 事大意識

외세가 입힌 손상 가운데 가장 오래되고 깊은 흔적을 남긴 것은 중국문화의 침윤이다. 대체로 청동기 말기인 기원전 5세기에 한자가 들어왔고, 늦어도 철기시대가 1세기 이상 진행된 기원전 2세기에는 유교를 비롯한 중국사상이 광범하게 유입되었다. 그로부터 점차 한국사의 주도적 물줄기에 편입해온 중국적 문화요소들이 준 주체성에의 상처는 후대로 갈수록 그것들이 외래적 異物의 작용태임을 자각하지 못할 만큼 한국사의 주요 구성인자가 되었다. 그리하여 고조선, 부여, 辰韓, 삼국, 고려에 걸쳐 이어져온 독자적 사상과 풍속은 대체로 12~13세기에 이르러서는 거의 인멸되고 말았고, 그 이후 적어도 지배계급의 문화영역에서는 중국적인 것이 전반적인 지배력을 누리게 되었다.

중국적 요인이 한국사의 주체적 역동을 찌그러뜨리고 구부러뜨린 역기능의 비극적 실상은 그러한 왜곡에 자발적으로 나선 역사적 한국인의 행태로 드러난다. 그러한 자발적 주체성상실 행태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예로서는 자주적·진취적 요청세력에 대한 사대적·보수적 김부식일파의 정치적 승리(1135년)를 들 수 있다. 신채호가 ‘朝鮮歷史上 一千年來 第一大事件’이라는 논문을 통해 절규한 바에 의하면 요청파의 패배가 비극적인 역사적 의의를 지니는 것은 김부식이 요청세력진압의 공로에 힘입어 『삼국사기』의

편찬을 주도하면서 儒家的 정통론에 입각한 일관된 사대주의적 필법으로 고대사를 왜곡했다는 사실, 그리고 당시까지 광범하게 전해 내려오던 고대역사서, 특히 자주지향 기록물들이 철저히 은닉되고 금지됨으로써 오로지 『삼국사기』만이 권위있는 고대사기술로 행세하게 된 사실에 연유한다.

한국사 주체 자신에 의한 주체성 부정의 태도는 김부식 이후 더욱 심해진다. 17세기 조선에 들어오면 문물교역과 국방문제의 해결을 위한 외교정책으로서의 수단적 사대는 의미를 잃게 되고, 중국에 대한 사대는 내재적 가치를 지닌 대원칙으로 격상된다. 중국이 북방 만주족이 세운 淸왕조에 지배됨으로써 중화족이 정치적 주권을 상실하기에 이르자 건국초기부터 성리학적 정통관을 고수하던 조선의 지배세력은 小中華의 지위로 만족하던 수준을 넘어 中華 자체로 자임하게 된다. 그러한 의식과 태도는 인간적 문화 끝운리적 질서를 기준으로 中華와 夷狄를 구분하던 당사주체의 입장에서 현실적 중화가 조선 밖에 없다는 일종의 증거를 담은 것이기도 했지만, 민족적 자주성으로 매개될 중세적 형태의 종족적 주체성을 통째로 방기한 극단적 사대주의의 표현이라고 보는 것이 훨씬 정확한 판단이 될 것이다.

중국적인 것에 대한 존송과 흠모는 우리말과 우리글을 조잡한 ‘지방언어’[方言]로 치부하고, 학문과 사상을 올바르게 표현하고 전승하는 일은 한문 곧 중국어를 매개로 해서만 가능하다고 믿는 태도로 드러나기도 했다. 한글이 창제된 이후로도 우리말은 일상생활의 저급한 의사소통에만 유효한 언어로 간주되었고, 수준높은 사상적·이론적 관념체계를 구성하는 데에서 한글은 한문에 대한 보조언어로만 기능했다. 한문을 특정 異族의 언어 곧 외국어로 보지 않고 보편언어로 보는 태도는 나아가 중국어를 당위적 모국어, 곧 ‘올바른 우리말’ 내지 ‘표준어’[雅語]·공용어로 상정하는 데까지 이르게 된다. 이런 점에서는 가령 정약종과 같이 원초적 민족주의의식을 지녔던 선진적 지식인들도 의미있는 예외가 될 수 없었다. 한문글을 놓고 우리말 트(ㅌ)를 달아 읽는 오늘날까지의 관습은 오랜 물

주체적 언어관에 연유하는 것이다.

중국문화에 대한 사대주의 가운데 가장 심각한 것은, 그러나 과거의 것이 아니라 현재의 것이다. 방법론적 맥락에서 식민사관·사대사관을 극복하고 민족주체사관을 확립한 대표적 기수로 자처하는 원로·중진 사학자들도 구체적 역사기술에서는 여전히 한국사는 초기 국가형성기에서부터 중국으로부터의 영향을 통해서만 성립되는 것으로 그려내고 있다. 그들은 예컨대 “韓半島가 완전한 역사시대로 진입한 것은 漢四郡의 설치에 힘입은 것이었다.”고 언명하고, 삼국의 국가체제확립에 대해서는, 사대사관에 입각한 『삼국사기』의 기록조차 신뢰할 수 없는 것으로 단정하면서 그보다 수백년 나중인 4~5세기에 비로소 이루어진 것으로 판정한다. 또한 唐의 고구려침략과 관련하여 당태종은 “군사운용술이 신통한 전략적술가이자 부하를 아끼는 인자한 임금”이라고 칭송하면서 고구려군의 총사령관인 연개소문에게 대해서는 “사납고 포악한 독재자”로 묘사함으로써 『唐書』의 내용을 고구려사의 기술로 삼은 국사학자도 있다. 임진왜란과 관련해서는 조선군의 작전은 별 성과를 거두지 못한 반면에 일본침략군을 퇴치한 주요 전과는 대체로 明의 원군에 의해 달성된 것으로 기술하는 태도도 적지 않게 나타난다.

오늘날 국사학계가 모두 저러한 병폐에 물들어 있는 것은 물론 아니다. 고고·인류·금석·지리·언어 등 다양한 분야의 과학적 성과들이 이론적·방법적으로 원용한 신진학자들이나 북한쪽의 연구성과에 의하면 역사적 진실은 저들 시대·종속·식민 사관의 기술과는 다르다. 국사학계의 이른바 태두들이 보여주는 역사의외곡은 원칙적으로 제국주의 일본이 19세기말 이래 육성한 御用·官邊 朝鮮史學에 기인한다. 즉, 이병도·이선근 등 선배들이 식민지시기 교육을 통해 주입받은 비뚤어진 ‘실증’ 사학의 내용을 몇 다리 건너 되풀이하는 그림자 내지 매아리인 것이다.

4. 日帝 식민사관의 그림자

18~19세기에 걸쳐 중국중심의 보편세계관을

탈피하고 원초적 자주민족관의 내용과 근거를 학문운동·사회운동으로 축적해 나가던 민족사내재적 근대화의 흐름은 제국주의 일본에 의한 대한제국 국권의 강탈로 많은 부분 차단되었다. 19세기 후반에 이르러 일본은 한국사의 자주적 발전이라는 진실을 부정하기 위한 교묘한 조작을 학문적 이론체계의 형태로 준비했다. 강제합병 후 일제는 한국의 주요 문화유물을 탈취해갔다. 특히 한국사의 원류를 서술한 고조선 관련 서적과 삼국 이전 역사서를 철저히 찾아내어 없애버티거나 비장해갔다. 삼국시대사의 앞부분을 신석기형 원시사회로 규정하는가 하면, 단군을 일본신화에 나오는 인물의 아우라고 하는 희한한 착상을 내세운 日鮮同祖論을 강변하고, 한국사에서 청동기시대를 지우고 중국문화의 이식으로 고대사를 채우기 위해 ‘金石併用期’라는 상상적 造語를 고안하기도 했다. 또한 4세기에서 6세기까지 일본이 백제·신라·가야를 지배했다고 주장함으로써 고대 한일관계의 실상을 뒤집어놓는 등의 역지이론을 조작하고, 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廣開土王碑를 변조하기도 했다. 그 밖에 한국사에서의 고유사상부재론, 고착·종속·사대성에 근거한 독자사상결핍론, 한국사의 停滯論, 한국민족의 분열·파당성의 강조 등의 형태로 한국사상사 전반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식민지 교육을 통해 확산시켰다.

논리적 지평에서 볼 때 일본제국주의가 자행한 한국사의 왜곡 가운데 歷卷이라 할 만한 것은 한국사가 고래로부터 일본에 의존하여 성립되었다는 날조된 이론에 있다. 그러나 더욱 심각한 문제는 그들의 어거지 논리를 한국인들 자신이 받아들였다는 데에 있다. 특히 일본인들이 자신의 역사에는 적용하지 않으면서 우리 한국사에만 적용하도록 가르친 ‘실증’ 사관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인 국사학자들이 적지 않다는 사실, 그리고 그들이 광복 이후 6·25와 5·16을 거치면서 남한 국사학계를 주도하는 권위를 행사하게 되었다는 사실이 가장 심각한 비극이라 할 것이다.

현재 남한 국사학계의 제도적 주류에 공유된 반민족적 사관과 그에 입각하여 이루어진 史實記述은 일제 官邊史學의 재생형태에 지나지 않

는다. 그들의 학문적 신념은 오킨대 방법적 실증주의와 내용적 사대주의로 압축된다. 그 가운데 몇 가지를 열거해보자.

역사기술은 엄격한 문헌학적·고고학적 고증·실증을 거쳐 이루어진다. 발굴된 그리고 발굴될 모든 역사적 유적 가운데 한국사에서 중심적 의의를 지니는 것은 주로 압록강·두만강 이남의 한반도 내부, 그 중에서도 남부지역의 유물이다.

찬술자와 찬술연대를 확인할 수 없는 역사서는 믿을 수 없다. 믿을 수 없는 기록에 담긴 내용은 사실일 수 없다. 『삼국사기』, 『삼국유사』의 서술도 달리 확인할 수 없는 내용을 취급했을 경우 믿어서는 안 된다. 특히 『日本書記』의 기술내용과 상치되는 한국사 기록이나 일본적 실증사학이 해석하는 것과 다른 한국사 해석은 잘못된 것이다. 근대 이전 한국사에서 가장 합리적인 정신을 갖추고 있었던 유학적 지성들이 부정했을 만큼 애매한 내용의 역사서술이나 사학적 주장은 오늘에 와서는 더욱 부정될 수밖에 없다.

한국사는 성립초기부터 적어도 19세기 말까지는 전반적으로 중국에 뒤진다. 한국사에 담기는 대부분의 현상, 특히 중요한 변화는 모두 중국적 모델을 가진다. 아무리 시간축을 소급하여 살피더라도 한국이 중국보다 발전했거나 중국과 대등했던 시대의 역사적 존재는 어떠한 문헌·금석·고고학적 자료로도 실증·확인될 수 없다. 사료적 근거를 밝힐 수 없는 상고시대의 조선은 당시의 중국에 비해 말할 것도 없이 뒤진다.

19세기사에서 조선은 명확히 일본에 뒤진다. 그 이후 한국사의 진전에는 일본의 영향이 컸다. 특히 한국에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이 도입되고 산업화가 이루어진 것은 일본의 공적이다.

형식적·절차적 방법론 수준에서의 실증의 강조라는 의외 속에 한국사의 진실을 호도하거나 왜곡하는 일제 관변사가들의 관점은 현재 남한에서 권위를 누리는 중진학자들의 국사서술 곳곳에서 재현되고 있다.

임진왜란 7년전쟁을 승리로 이끈 조선 의병과 관군의 투쟁은 최소한으로 축소되고, 전쟁의 종결은 豊臣秀吉의 사망으로 인한 왜적의 자진 퇴각으로 묘사되는가 하면, 인민살상·재산탈취·문화재약탈 등 왜적의 만행에 대해서보다는 오히려 조선인민의 권력저항적 放火사건을 더욱 부정적인 시각으로 상세하게 다루기도 한다. 일본제국주의가 침입하기 이전의 조선사회는 극도

로 빈곤하고 무기력한 상태로 정체되어 있었고 따라서 자본축적과 상공업발달 등 경제근대화 요인은 ‘아무 싹도 볼 수 없는’ 지경이었다고 묘사되기도 한다. 이는 일제에 의한 대한제국의 강제합병을 한국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한국의 역사를 발전시킨 중요한 계기가 된 것으로 정당화하는 관점을 드러내는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또 흥경래의 반란 때 농민군이 임명한 지방 수령들을 ‘임시수령’으로 부르면서도, 임진왜란 때 왜적에게 투항하여 그들로부터 부사로 임명된 사람에 대해서는 정식 부사로 기술하기도 했다.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에 걸쳐 전개된 의병운동과 관련해서는 조선인민의 투쟁보다는 일본토벌군의 활동을 더욱 상세하게 기술하기도 했다. 진보적 사학자로 평가되는 중진 한 분은 비교적 최근의 연구저서에서 “1945년 해방 당시 대일 무장항쟁세력은 극좌에서 극우에 이르는 국내외의 일곱 갈래 독립운동세력 소속을 모두 합쳐 5백 명 정도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그러한 주장은 가령 일곱 갈래 독립운동세력 가운데 하나인 연안파만 하더라도 “1만여 명의 조선의용군이 총사령관 김무정의 인솔로 국내 진입중이다.”라는 당시 정세 체험자의 해방정국진상 보고에 비추어 쉽게 반증되고 만다.

오늘날의 국사기술이 전반적으로 반봉건적 인민봉기나 반외세적 민족저항에 대해 인식한 평가를 내리는 현상은 일본제국주의가 심어놓은 史觀을 적용하는 무비판적·무반성적 자세와 함께 아직껏 일본측 관변사료를 중시하는 안이한 태도가 연구자들에게서 불식되지 않는 데에 기인한다 할 것이다.

한국사기술에 작용하는 일제식민사관의 방법적 핵심인 실증주의는 영국 등 서양의 철학과 과학에서 온 것이었다. 그것은 일제가 불러가고 대신 들어선 미국의 신식민주의에 의해 더욱 강력한 힘을 발휘하게 된다.

5. 서양적 近代化와 미국의 新植民主義

해방 아닌 해방을 맞이한 이후 남한의 한국인들은 생활과 학문의 모든 측면에서 미국적인 것, 서양적인 것을 거울로 삼게 되었다. 우리를 지

배하는 미국의 군사적·정치적 힘의 실체는 그 배후의 문화와 역사일 반까지를 '우수한 것'으로 보는 착각을 유도하였다. 정부의 정책에서 개인의 일상생활에 이르기까지 서양적인 것이 존중되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확산되었다. 개인적·사회적 삶에 지침으로 작용하는 사상 내지 이데올로기, 전문적 학문으로서의 철학과 과학, 그리고 예술·종교·윤리를 포함한 문화일반 등의 모든 영역과 수준에서 서양적인 것을 학습하고 수용하는 것이 시대적 과제로 되었다. 그리하여 경제·정치·문화의 모든 분야에서 미국유학 출신들이 이 땅에서의 삶을 이끌어가는 주도 세력으로 등장하게 되었다.

해방 이후 50년 가까운 세월 동안 이루어진 서양철학의 확산은 한국의 학문과 사상을 크게 바꾸어 놓았다. 그 중에서도 실증주의·과학철학·분석철학 등 신경험론계통의 영미철학은 제도권과학의 영역에 관한 한 결정적 지배력을 장악하고 있다. 그것들은 강단철학의 전공영역으로서 '70년대 이후에야 본격적으로 퍼져 나갔지만, 각종 분과학문[科學]의 방법론적 원리 내지 기초로서는 '50년대부터 이미 광범하게 받아들여졌다.

신경험론철학은 분과별·개인별 차이를 보이면서도 대체로 다음과 같은 과학방법론적 전제·원리와 존재론적 관점을 핵심적 신념으로 공유한다.

- 과학적 탐구는 보고 듣고 만지는 등의 직접적 감각(경험) 또는 그 연장으로서의 실험·관찰 등 간접적 감각이 가능한 주제대상에 대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 탐구결과는 경험적 방법을 통한 사실상응성의 확인, 그리고 논리적 종합성과 범주적 상호관련성의 확인을 통해 진리 또는 가설로 통용된다.

- 경험적으로 입증될 수 없는 대상에 관한 언명은 무의미하다. 예컨대 "불란서의 현재 대통령은 대머리이다."라는 명제와 같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 개념을 주제로 한 언명은 허위이거나 적어도 무의미하다.

- 감각경험이 불가능한 대상에 관한 형이상학적 언명은 과학의 영역에 진입할 수 없다. 형이상학적 명제는 경험적 명제로 환원되거나 경험

적 명제와의 관계를 통해 설명될 수 없는 만큼 진위판별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형이상학적 명제에 관한 논리적 타당성의 검토는 그 자체로는 무의미하다.

- 인식주관의 존재는 인식활동 자체의 자기적 관에 의해 자명한 사실로 승인된다. 그러나 인식대상의 존재는 객관적 실재로서가 아니라 감각자료(sensa)라는 의미에서 상정된다. 따라서 인식내용 곧 탐구결과는 자연세계에 대한 객관적 재표현이 아니라 인간의식의 구성물이다.

- 탐구대상은 가치중립적·물가치적이며 적어도 등가치적이다. 탐구주체는 생활적利害·關心을 배제해야 하고 또 배제할 수 있다. 도덕적 선·악, 사회적 정의·불의에 관한 명제는 형식적·구조적 논리타당성의 검증은 가능하나 실질적 진위여부의 해명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가치의 문제는 과학적 탐구의 직접적 주제가 될 수 없다.

- 논리학을 독립된 학문분과로 상정할 때 철학에 부여된 임무는 과학일반의 경계 및 분과과학간 경계를 확정하고, 과학적 진리의 성립조건을 확립하거나 설정하며, 과학적 인식의 근거와 한계를 해명하는 등 과학적 탐구를 위한 방법적 원리를 제공하는 것으로 한정된다. 철학은 과학적 탐구의 후견인적 지위를 지니되, 그 자체의 고유한 구체적 탐구주체를 지니지 않는다. 세계 내 사물과 현상을 구체적으로 해명하는 일은 과학의 몫이며 철학의 몫이 아니다.

경험분석적 과학방법론으로서의 영미철학은 탐구대상 사물이나 관념들을 등렬적 지평에 놓고 '하나'의 가치초월적 분석틀로 가능질하는 주제결석의 보편적·무차별적 주관주의 위에서 있다. 그러한 관점에는 개인적·사회적 사상의식에 간여하는 경제정치적 현실관계의 규정력에 대한 자각이 결핍되어 있다. 학문적·생활적 의식이 지닌 存在被拘束性에 대한 비판 또는 반성이 결여된 관점에서는, 예컨대 전통사상을 당대 및 후대의 역사상황·생활방식·학문발달과 관련하여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오히려 불필요한 일이 된다.

방법적 원리의 합리성·체계성·세련성을 학문·사상에 대한 평가의 최우선 기준으로 받아

들이는 경험분석적 관점은 '한국적인 것'이나 '한국의 전통' 같은 것은 직접적 탐구주체로 삼지 않으며, 분석대상으로 삼는 경우에도 전통철학의 학과별 특성이나 시대별 변이에 관한 의미 있는 파악을 대부분 놓치게 된다. 이런 관점은 도구적 성격의 분석방법들을 방법론적 수준에서 작용하는 원리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학문적 탐구의 경계를 획정하고 사상내용의 실천적 가치를 측정하는 데까지 적용되는 포괄적 원리로 봄으로써 분석대상은 물론 분석주체 자신까지를 비현실적 추상으로 떨어뜨리게 된다.

실증주의나 분석철학으로 대표되는 서양정신에의 顛倒는 한국과 한국적인 것, 나아가 동양과 동양적인 것을 전반적으로 평가절하하는 태도로 연결된다. 그러한 태도에서는 예컨대 한국 민족이 일제로부터 해방된 것은 순전히 서양이 주도한 열강의 연합 때문이고, 민주공화국 체제의 국가를 건설한 것은 미국의 덕분이다. 그러한 안목에서는 역사시기를 거슬러 올라가 19세기 후반에 일어난 서양세력의 간헐적 무력도발과 살인·약탈의 만행도 '평화적 通商과 修好'를 목적으로 한 사절단의 입국으로 묘사되고, 그들의 패퇴는 조선인민의 전투적 축출 때문이 아니라 자발적 후퇴로, 그리고 그들에 대한 조선 軍民의 무력대항은 '한·미 양국을 위해 불행한 사건'으로 기술된다. 그런 사대주의적 역사기술의 관점에서 보면 더욱 거슬러 올라가 19세기까지 발달한 閩粵문학·唱歌·雜歌는 불안·혼돈·침체·무질서의 사회상에 대응된 '창작능력의 고갈'을 반영하는 것이며, 한국문학은 일본을 통한 서양 문예사조의 수용을 통해서만 비로소 새롭게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이 된다.

남한사회에서의 국사기술과 과학방법론적·철학적 관점이 형식적 합리성과 실질적 사대성의 결합을 주축으로 삼아온 것에 비해 북한에서는 비교적 일찍부터 학문과 사상에서 주체적 관점을 세우는 데에 성공하였다. 1985년에 출간된 『위대한 주체사상 총서』는 철학적 관점에서 불태 순환논리와 두날(double-bladed) 논리로 주장하고 있으며, 동어반복적 무의미성을 포함하는 등의 허점을 지니고 있다. 이에 반해 국사기술에서의 주체확립은 예컨대 사회과학원력사연구소가

남한 진단학회 편 『한국사』에 대한 포괄적 비판으로 『력사과학』에 연재한 『한국사』를 평할'에서 보여주듯이 '60년대 중반에 이미 일정한 체계화에 도달하였다. 앞에서 예거된 남한에서의 사대사관적 국사기술 가운데는 바로 이 글들에서 따온 것이 적지 않다는 점을 밝혀둔다.

6. 개인적·집단적 事大主義의 根源

사대현상은 개인의 수준에서도 흔히 발견될 만큼 자연적인 면이 있다. 작은 것, 약한 것이 큰 것, 강한 것에 기대는 것은 인간뿐 아니라 모든 생물의 생존방식에 속한다. 약한 것이 강한 것과 직접 대결하여 이겨낼 수는 없다. 개도 지보다 센 놈 앞에서는 꼬리를 사린다.

집단 사이에도 사대현상은 발생한다. 옛부터 약한 나라는 강한 나라에 먹이지 않기 위해 강한 나라의 요구를 수용함으로써 존속해왔다. 중국에 대한 고려와 조선의 사대는 선진문명의 도입과 평화의 확보를 위한 현실적 방략이었다. 女眞과 倭에 대한 교린 또한 국방문제의 효과적 해소를 위한 전략의 일환이었다.

사대가 심하면 더부살이[寄生]가 된다. 사대가 개체적·집체적 존재지속을 위한 방략의 수준을 넘어 이념적 원칙 내지 존재의 목표가 될 때 사대 '주의'가 성립한다. 단순한 '사대' 아닌 사대 '주의'는 일종의 더부살이 의식이다.

오늘날 한국사회를 병들게 하는 주체성 상실의 핵심적 내용인 사대주의는 여러 가지 양상으로 나타난다. 무엇보다 근본적인 병인은 내 문제를 나 자신의 힘으로 해결하겠다는 의지가 부족하다는 데에 있다. 우리 사회에는 혈연, 지연, 학연 등의 연고를 이용하여 남보다 유리한 위치에 올라서려는 경향이 강하게 남아있다. 이러한 연고주의는 귀속적 지위(ascribed status)를 당연시할 뿐 아니라 획득적 지위(acquired status) 또는 업적적 지위(achieved status)보다 우월한 것으로 여기는 태도로까지 나아간다.

조선시대까지 일반화되었던 전근대적 귀족주의의 가치관은 조상의 공적에 대해 자손에까지 포상하는 蔭敍制나 개인의 과오에 대해 천척이나 이웃에까지 책임을 묻는 連坐制 등에서 대표적

으로 드러난다. 심지어 개인이나 집단의 功過에 따라 해당 지역사회가 지닌 행정단위로서의 자격을 격상시키거나 격하시키는 포상·징벌[褒貶]이 제도적으로 시행되기도 했다.

봉건적 귀족주의는 우리 삶의 곳곳에 살아 숨쉬고 있다. 남들이야 어떨든 우리 식구단 잘살면 된다는 가족이기주의가 판치고 있다. 기업이나 공직사회에서 성립하는 직분상의 관계를 신분사회에서 통용되던 孝悌忠信의 윤리규범으로 규제하려는 풍조가 성행하고 있다. 동료인간들의 사랑과 존경을 받을 만큼 오늘의 공동체에 기여하는 일에 노력하기보다는 과거에 훌륭한 업적을 남긴 조상을 빛내는 데에 돈과 시간을 동원하는 자칭 명문집안이 수두룩하다. 인격이나 능력은 어떨든 친인척과 고향사람과 동창생이라면 무조건 잘봐주는 것이 인간의 도리인 양 ‘양해’되고 있다. 귀속적 가치의 실현을 위해서라면 법규는 철저히 준수하기보다 가능한 만큼 ‘적당히’ 피해가면 된다는 편법주의가 만연되어 있다. 사회적 가치의 배분방식과 정치적 권위의 階序체계에 이르기까지 귀속주의는 우리 삶을 틀 짓는 정서적 통념이 되어 있다. 이렇듯 삶의 공식적 규범과 실질적 관행이 괴리되어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맹자는 “지혜로운 사람만이 자기보다 큰 자를 섬길 줄 알며, 仁한 사람만이 자기보다 작은 자를 섬길 줄 안다.”고 했다. 맹자에 따르면 작은 것으로서 큰 것을 섬기는 지혜는 하늘을 두려워하는(畏天) 덕이 되며, 큰 것으로서 작은 것을 섬기는 仁은 하늘을 즐기는(樂天) 덕이 된다. 정세상황과 그 속에 놓인 자신의 능력한계를 정확히 판단하는 것은 지혜이며, 작고 허약한 것들의 존립을 확보해 주는 것은 사랑인 셈이다.

작으면서 큰 것을 섬기는 것은 나의 삶을 확보하는 지혜이며, 크면서 작은 것을 섬기는 것은 남의 삶을 허용하는 애정이다. 지혜와 애정은 나와 남의 주체를 세우는 동시적 요인이다. 작은 것이 큰 것에 대드는 것은 자신의 생존과 안정을 상실하는 반응이며, 큰 것에 빌붙는 것은 스스로의 존재를 무효화하는 맹종이다. 큰 것이 작은 것을 잡아먹거나 못살게 구는 것은 자신의 생존조건을 파괴하는 횡포이며, 작은 것에

따르는 것은 스스로의 삶을 무력화시키는 우둔이다. 주체를 망각하거나 상실하는 방식의 삶에는 지혜나 자비가 들어설 자리가 없다.

광복 이후 우리 사회에는 강한 것이 약한 것을 잡아먹고 억압하는 분위기가 지배해왔다. 돈과 권력과 지식과 기술을 가진 자가 갖지 못한 자를 억압하고 착취하는 것이 제도적으로 보장되는 사회에 우리는 살고 있다. 역대 정권과 그 계류세력으로서의 금권은 작은 것을 섬기는 여유 내지 보편적 애정을 발휘하기는커녕 작은 것을 억압하고 착취함으로써, 위낙 부른 자신의 배를 더욱 불리는 일에 급급해왔다. 경제·정치·문화의 각 수준에서 없는 자는 있는 자의 뜻을 거스르지 않도록 스스로를 길들이도록 강제되어 왔다. 노동자·농민 등 이땅의 민중은 자신이 탐욕스러워 일함으로써 생존을 부지하면서도 마치 그것이 금권과 정권의 자비와 은총 덕분에 가능한 것인 양 생각하도록 순치되어 왔다. 약한 자들에게 강요된 굴종, 이것이 바로 현대 한국사회가 당면한 사대주의·주체상실의 가장 심각하고 근원적인 病因이다.

7. 經濟政治的 사대주의와 反民衆性

대내적 억압과 수탈을 자행해온 경제권력·정치권력은 대외적으로는 강한 자에 빌붙어 자신의 생존과 성장을 도모하는 사대주의를 신봉해왔다. 최초의 대한민국정부를 구성하고 주도한 세력은 일제시기 동안 외교 위주의 귀족적 독립운동에 주로 종사한 친미주의자 이승만, 그리고 개량적 독립운동과 더불어 친일행각을 벌이던 민족주의우파 인사들의 집단인 한국민주당 계열이었다. 그들은 일제 퇴각 이후 3년간 남한을 직접 통치한 미국의 반공정권수립정책에 가장 부합하는 정치적 지향을 지니고 있었다. 이승만 친미정권에 이어 들어선 구 한민당 계열의 장면정권은 본질적으로 친미적이었고, 박정희정권이래 역대정권은 미국·일본의 국제금권권력에 의존하는 사대관계를 더욱 강화하였다. 특히 박정희정권은 동북아정세의 안정을 포함하는 국제질서의 재편을 주도하려는 미국과 일본의 역할분담에 편승하여 1965년 한일조약체결과 평화선 철

때 이후 한국경제의 대일의존도를 급격히 제고시켰다.

친미·친일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사대주의적 정치권력은 같은 성격의 경제권력을 창출하는 데 성공하였다. 미군정과 이승만정권은 일제가 남긴 귀속재산의 拂下를 통한 남한사회 원시자본 축적 추진과정에서 친미·친일 기득권집단에게 특혜를 부여함으로써 명목상 민족자본이되 실질적으로 매판자본인 경제세력을 형성하였다. 오늘날의 독점자본이 반민중적·반민중적·대의중속적 경제권력을 이루고 있는 것은 초기축적과정의 모든 과정과 경로에서 일제와 미군정 및 역대정권과 밀착한 데에 그 원인이 있는 것이다. 남한 독점자본이 지닌 원초적 관료성·매판성은 바로 의제와 정권에 대한 寄生的·사대주의적 관계의 표현이다.

자본과 정권의 대미·대일 중속성 내지 사대관계는 현재로서는 일견 유동적이다. 5·16 쿠데타 이래 남한정권은 미국정부의 사전·사후 승인을 통해서만 유지될 수 있었다. 김영삼정권 출범 이후 대미관계는 형식적 측면에서는 상대적 정상화로 나아가고 있다. 예컨대 역대 대통령이 취임 후 가장 먼저 추진하는 것이 미국방문과 한미정상회담이던 관행적 관계는 문민정권이 확보한 상대적 정통성에 기반하여 이제 청산될 전망을 보이고 있다. 한편, 노태우정권 때부터 추진되고 있는 북방정책의 핵심적 내용인 남한제벌의 사회주의권 진출은 선진 국제독점자본으로부터 견제당해왔고, 앞으로도 그러할 것이다. 그에 따라 남한 독점제벌은 국제금권권력과의 관계에서 원천적 중속 가운데서도 상대적 독자성을 확보할 필요와 만나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러할 것이다.

남한사회의 지배권을 공유해온 자본과 정권 간의 관계도 재정립될 시점에 와 있다. '70년대까지 독점제벌은 정권의 비호와 특혜 아래 성장하였다. 그러나 '80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 사정이 변화하였다. 규모와 비중이 엄청나게 커진 독점제벌이 국민적 기반이 허약한 독재정권에 대해 억압과 수탈의 권력행사에 있어 상대적 주도권을 발휘하기 시작한 것이다. 김영삼정부가 들어서면서 국가권력은 독점자본을 길들이는 칼자루

를 쥐고 있는 듯이 보인다. 양자는 당분간 제한된 대립과 경쟁의 관계를 유지할 것이다. 정치권력의 주도로 성립된 정경유착은 민중수탈체제 유지·강화를 둘러싼 주도관계의 역전과 재역전의 단계를 거치고 있다.

정권과 자본의 대외적 사대관계의 유동성 및 양자간의 내부적 권력투쟁은 그러나 질적 변화로 이어지기는 매우 어렵다.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의 전일적 관철이라는 전반적 정세상황으로 볼 때 보수정권이 지속되는 한 경제권력은 조만간 민중지배체제의 유지·강화에 있어 정치권력에 대해 상대적 주도권을 장악하게 될 개연성이 높다. 그리고 금권·정권 간의 상호관계위상이 어떤 형태로 잠정귀결되든 간에 양자는 한국민중에게 대해 모순적 지위에 놓일 수밖에 없다. 공개와 개혁이라는 이름의 정치적 공세를 펼치고 있는 김영삼정부는 적어도 지금까지의 형태로 보면 경제정책에 관한 한 철저히 보수적인 자세를 견지하고 있다. 현정부는 오래지 않은 조율과정을 거쳐 주요계벌들과의 긴장관계를 해소하고 나면 근본적으로는 민중과 대치되는 편에 서서 자본의 이익을 대변하고 옹호하는 속세를 드러내게 될 것이다. 이 점은 가령 금융실명제나 토지공개념 도입 등의 개량적 정책을 임기 내에 시행한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는 달라질 것이 없다. 정권과 금권은 좀 더 부드럽게, 그러나 훨씬 안정된 방식으로, 민중에 대한 억압과 수탈을 실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데에 합의할 것이다. 이런 점에서, 즉 민중과의 대립을 회피할 수 없고 회피하지 않으리라는 점에서, 보수정권과 독점제벌의 대외의존성 곧 사대적 관계는 그들 자신의 의지와 능력으로는 결코 극복될 수 없을 것이다.

제벌과 정권의 대외의존성은 민중에 대한 대내적 억압·수탈과 짝을 이루고 있다. 앞서 말한 “삶의 공식적 규범과 실질적 관행이 괴리되어 있는 우리 현실”의 봉건적 귀속주의도 실정법과 공식 제도 및 그 운용을 장악하고 있는 지배세력과 민중 간의 대립에 의해 더욱 강화되고 있다. 그 역도 성립한다. 즉, 민중과 지배세력 간의 괴리와 대립은 우리 사회의 총체적 근대화를 저해하며, 나아가 대외적 사대주의를 더욱 심화

시킨다. 이제 무조건 사양을 쫓아가는 식의 근대화·현대화에 중지부를 찍을 수 있어야 한다. 이는 민중의 생존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고 민중이 국가사회적 의사결정에 주체로 되는 체제가 확립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결국 학문의 정체성을 제대로 확립하기 위해서는 현실 사회의 대외존성을 극복하고 경제정치적 실질 민주화가 추진되어야 한다.

8. 學問의 정체성 확립을 위한 條件

한국학문에 담긴 사대주의의 역사적 연원과 현실적 형태에 관한 앞에서의 서술은 사대주의와 대응되는 한국학문의 정체성위기가 전공학문으로서의 역사학과 철학, 특히 한국철학과 국사학의 잘못에 기인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 다만 어떤 분야·영역에서든 철학적·역사적 접근을 할 경우 그에 합당한 기본적 관점과 방법적 원리를 갖추어야 한다는 점, 그리고 기존의 철학과 사학은 문제의 극복에 대해 결코 책임을 면제받을 수 없다는 점은 분명히 지적되어야 한다.

한국학문의 정체성확립은 철학과 사학만의 과제가 아니다. 모든 분과학문은 각각의 이론사와 방법론의 탐구와 관련하여 나름대로의 철학적·역사적 분석과 해석을 피할 수 없다. 그러한 탐구들이 學際적으로 연관되고 통합될 때 학문의 총체적 정체성은 창출 또는 재창출될 수 있다. 비유컨대 조선의 멸망은 객관적 관점에서 서구자본주의의 제국주의적 발전에 핵심적 원인이 있지만, 주체적 관점에서의 패망요인 규명은 적어도 대한제국에 이르는 조선말기 경제정치역동에 내재한 요인들을 뽑아낼 수 있어야 한다. 문제의 발생원인과 그 해결의 책임은 반드시 한 곳으로 모여야 하는 것이 아니다. 사회역사적 문제는 그 원인의 소재와는 무관히 어떤 경우에도 사회역사적 공동주체 자신의 힘으로만 해결될 수 있는 것이다.

한국학문의 정체성확립은 ‘한국적인 것’을 찾아내고 그것을 방법적·이론적 중심으로 세움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전근대적 가치관이나 정서는 오늘에 되살려야 할 유산이라기보

다 극복해야 할 대상이다. 고유전통을 숭상하고 외래문화를 배격하는 이분법적 태도는 과거적 요소를 강하게 투영시킨 환상적 현실관의 산물이다. 봉건적 윤리규범을 오늘의 경제정치적 권력관계에 변용적용하려 하거나, 전통철학에 대한 해명작업을 혈연집단이나 좁은 지역공동체의 명예를 빛내고 과거적 당파의 정당성을 옹호하려는 목적에서 家學 또는 기념사업의 형태로 추진하는 행태에서 이런 환상적 현실관은 잘 드러난다. 배타적 전통존중의 태도에는 노동으로부터 자유로운 위치에서 권익을 향유하던 전근대사대사대부의 생존조건 및 그 반영으로서의 선민의식이 깔려 있다. 특히 과거시대로 거슬러 올라가서까지 유교와 불교를 포함한 일체의 외래요소를 척결하고 ‘순수한 한국 고유사상’을 밝히고 수호하려는 태도는 국수주의적 민족지상주의와 함께 권력에 기생하는 어용성과 현실에 적면하기를 회피하는 종교성이 어우러져 있다.

외래의 것이라고 해서 한국사의 문화유산이 아닌 것은 아니다. 역사적 한국인이 펼친 삶과 의식의 역동에 따라 형성되고, 역으로 그 역동에 영향을 미친 사상이라면 당연히 한국사상이다. 고유의 것만으로 채워진 역사를 지닌 종족이나 국가가 없다. 외래의 것을 수용했다는 것이 문화적 열등성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다양한 외래문화를 접하고 수용한 족속들일수록 세계사적 영향을 남긴 경우가 많다. 중국유학이 고조선 이래의 고유사상을 누르고 지배권을 누렸다면, 당대적 현실상황에의 대응기능과 사상이론적 정합성 등의 여러 측면에서 우월했기 때문이다. 또한 외래의 것을 수용했다는 것이 곧바로 사대종속인 것은 아니다. 조선초의 철학자 정도전이 말한 대로 “하늘 아래 홀로 존립할 수 있는 사물은 없다.” 사회로부터 소외된 개인, 동시대 인류와 절연된 자족적 공동체, 역사로부터 고립된 사회, 고유의 것만으로 이루어진 역사는 없다. 한국사라고 예외일 수는 없다. 현재 우리가 지닌 외래적 학문과 문화는 이전 시대에 어떤 형태로 변모해왔건 간에 우리 자신의 것이다. 다만 한 가지 조건이 있다. 외래의 것을 받아들여 이되 ‘나’ 또는 ‘우리’의 입장에서 수용하고, 나의 관점에서 소화하고 재구성하며, 나의 관점에

서 다음 세대에 전수하는 것일 때에만 우리의 것이 된다.

현대의 외래사상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앵글로색슨계열의 신경현문철학은 분과학문들의 엄밀한 이론적 발전을 위해 필수적인 방법학적 도구들을 제시하고 있다. 시대의 공동유산으로 통용되는 방법적 원리·도구를 적극적으로 수용·활용하지 않고서는 세계사적 조류에 동참하고 나아가 그 발전에 기여하는 일은 불가능하다. 다만 실증주의·분석철학 등의 신경현주의는 사회역사적 현실을 총체적 수준에서 비판적으로 이해하고 밝은 미래를 개척해 나가는 데에 명확한 한계를 지닌다.

학문적 정체성의 위기는 사회정치적 개혁을 통해서 또는 적어도 그와 병행해서만 극복될 수 있다. 여기서 또 다른 문제가 제기된다. 진정한 변혁세력이 있는가? 변혁지향세력들에게는 정체성의 문제가 없는가? 정체성의 회복 내지 재창출이 비주체적 방식으로 추진된다면, 그것은 회화적인 것이 될 수밖에 없다.

전통사상과 외래학문이 지닌 한계를 두루 극복하고 시대의 문제를 해결하는 건강한 학문적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19세기 이래 발전해온 실천적 비판의 근본사상을 올바르게 수용할 필요가 있다. 마르크스의 변증법적·사적 유물론은 올바르게 해석되고 적용될 때 향후 한국학문의 바람직한 정체성확립을 위해 크게 기여할

것이다. 다만 여기에도 몇 가지의 조건이 있다. 첫째, 비판적 실천의 근본사상은 역사와 현실을 이해하는 전반적 지침으로서의 일반원리일 뿐이며, 현실적 사회구성의 구체적 측면들을 밝혀 주는 것은 아니다. 한국사회·한국역사에 대한 구체적·실증적 탐구가 누적되고, 그 성과가 올바르게 이해된 변증법적·사적 유물론에 접목됨으로써만 한국학문은 건강하게 발전할 수 있다. 둘째, 마르크스를 비롯한 실천적 비판의 원류사상들에 대해서는 직접대면을 통해 그 자체로 이해해야 한다. 종속이론에서 '주체사상'에 이르는 마르크스주의의 변용태들은 현단계 한국 현실에 들어맞을 수 없다. 서로 다른 사회역사적 배경에서 형성되고 적용된 이론들을 직수입하여 소비하는 불성실하고 안이한 학문행태는 지양되어야 한다. 셋째, 실천적 비판의 원류사상은 완성된 만병통치적 이론체계가 아니다. 사회역사적 인식의 일반원리는 서로 다른 사회구성에 대한 구체적·과학적 해명과 통합된 방식으로 현실모순의 극복을 위한 실천에 적용되고 그 성과에 비추어 검증됨으로써 끊임없이 새로운 내용을 담을 수 있다. 이러한 조건에 맞는 성실한 이론적 작업을 통해 비판적 인식의 일반원리가 더욱 풍부한 내용을 갖추도록 새로운 요소를 보태는 때까지 나아가갈 때 한국학문은 실질적 주체성을 확보하고 진정한 정체성을 확립하게 될 것이다. ■